

[종합·해설]

한·미 외무장관회담 뒤편 논의했다

“북 핵폐기 전략적 조율 해가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회담에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통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리 결의 이행=우선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북의 핵 폐기를 위해 균형되고 전략적 조치를 취할 것도 합의했다. 나아가 북의 2차 핵실험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 “화물 검색 등이 언론에 과장되게 보도됐으나 봉쇄가 목적이 아니고 결의 이행이 긴장을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美, PSI참여 확대 요구 안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약) 참여=이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은 라이스 장관이 PSI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라이스 장관은 부인했다. 다만 라이스 장관은 “현재의 긴장을 확산, 심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PSI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PSI가 시행된) 지난 2년여동안 각 나라에서 보유한 권한을 사용해서 위험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질을 검색하는데 국 제법과 정보에 의거한 검색이 이뤄져왔다”면서 “효과적으로 검색이 잘 이뤄져왔고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와 관련해) 내게 아이디어가 있고 (한국 측과)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 PSI와 한국의 참여범위에 대해 미측의 입장을 설명했음을 시사했다.

반, 개성·금강산 기준원칙 천명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약속=기자회견에서 반 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확인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 역시 “미국은 한국 대한 방위공약을 지지할 재확인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방방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북의 핵 도발로 한미 관계는 더욱 더 빛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라이스 “뭘 요구하려 온 것 아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당초 미국이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라이스 장관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또 반 장관도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으며 금강산(관광) 사업도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미축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되도록 조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다.

‘탕자쉬안 보따리’ 대북 설득 주효?

中 특사 방북 예상보다 빨리 김정일과 면담 방북전 부시와 핵 논의... 美 양보안 담긴 듯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이 예상 외로 빨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것을 두고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평양을 찾은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를 만나주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도착 하루 뒤 면담을 허락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선택 탕 특사를 맞은 배경에는 그가 들고 온 보따리 안에 든 내용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쓴 적이 없는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던진 김 위원장으로서 미국이 어떤 제안을 내놓았는지 중국은 어떤 중재안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과 면담에서 중국이 중재하는 북미 양자대화 제안이나 금융제재 잠정 중단과 같은 미국의 양보안이 제시됐을 가능성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

오고 있다. 탕 특사는 방북에 앞서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나 후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한 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북핵 사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 당연히 일정한 합의가 도출됐을 것이고 그 내용이 특사인 탕 국무위원을 통해 북한에 전해지는 단계를 밟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탕 특사와 마주 앉았다는 사

실만으로도 대화 채널을 여는 진전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도 핵실험 이후 다음 단계의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낙관적인 분석과 달리 북한과 중국이 모두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급히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탕자쉬안은 누구

부총리급인 탕자쉬안 외교 및 대만 담당 국무위원은 상하이에서 태어나 푸단(復旦) 대학에서 영어, 베이징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탕 위원은 주로 주일 대사관에서 외교관 경력을 쌓은 일 본통이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외교부장을 지냈다.

2003년 제4세대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외교 및 대만 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 중국 외교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실권은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탕 위원은 작년 7월12~14일 후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우호 방문’한 바 있으며, 올해 4월27~28일에는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 김정일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日, 추가 핵실험엔 ‘대북 봉쇄안’ 제출

일본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대북 봉쇄’에 가까운 강화된 결의안을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제출하

려는 결의안에는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왕래 금지 ▲북한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선박과 항공기의 왕래 금지 등은 이미 일본 독자제재에 포함했던 항목

일본 측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들 제재를 이처럼 국제사회로 확대한다

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공동제안을 위해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 외상은 18일 국회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안보리를 소집한다”며 “제재조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일 정부는 18일 도쿄 외교 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를 협의하기 위한 외교·국방 당국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with the headline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and listing various law firms and their services.

Advertisement for '재광주광양향우회' (Jae Kwangju Kwangyang Hyanguwui) featuring a list of activ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airman He Jaeho.

Advertisement for 'aT 농수산물유통공사' (aT Nongsuansanmul Yutonggongsa) featuring a table of building rentals and a list of products for sale.

Advertisement for 'OLZEN OUTLET' featuring a couple on an ice rink and a large '50%~40%' discount offer.